

기업인 대상 최신 반부패 정책 자료집(2023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기업의 청렴·윤리 경영 문화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신 주요 반부패 정책 자료집을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기업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주요 내용 (총 5건)

- ① 부정청탁 신고 '확' 줄었다('23.6.29.)
- ② '나랏돈 빼먹기' 국민이 직접 감시한다('23.7.10.)
- ③ 대한민국을 주도할 '청렴 MZ 인재' 양성('23.7.10.)
- ④ 대한민국 '종합청렴도 평가제도' 우수성 인도네시아에 알린다('23.7.17.)
- ⑤ 수사·조사기관 이해충돌방지담당관 현장 의견 듣는다('23.7.20.)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정책·정보 → 부패방지 자료실 → 청렴정책)

■ 문의사항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정책총괄과(044-200-7619)

부정청탁 신고 '확' 줄었다 **(2018년 3,330건 → 2022년 369건)**

국민권익위, 지난해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 발표

(‘23. 6. 29. 국민권익위)

지난해 각급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1,404건, 형사 처벌 등 제재 처분을 받은 공직자는 총 41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 부정청탁 신고는 369건으로 2018년 3,330건에 비해 크게 줄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월 29일 지난해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청탁금지법 시행('16.9.28.)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각급 공공기관에 접수된 위반 신고, 처리내용 및 교육·상담 등 제도 운영 현황 점검에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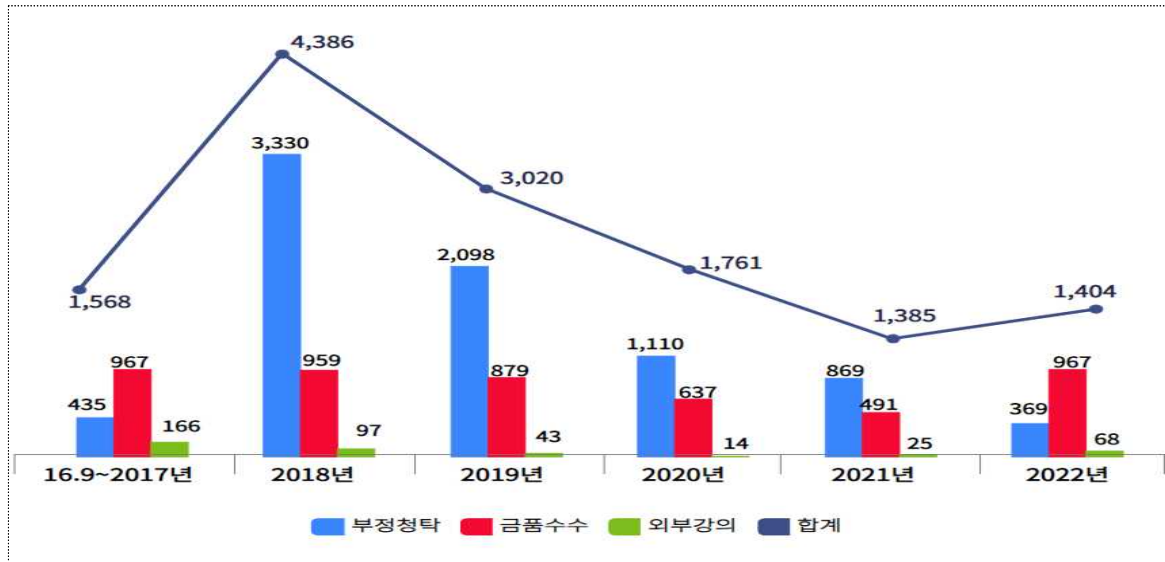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각급 공공기관에 접수된 법 위반 신고는 총 13,524건이다. 위반유형별로는 부정청탁 8,211건 (60.7%), 금품등 수수 4,900건(36.2%),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 413건 (3.1%)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위반 신고 추이를 보면 2017년 1,568건에서 2018년 4,386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1,404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금품등 수수 신고의 경우 법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지난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현 정부의 법과 원칙에 따른 강력한 법 집행의 결과로 해석된다.

한편, 부정청탁 신고의 경우 2018년 3,330건이 신고 접수된 이후 2019년도 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 369건으로 2018년 대비 약 8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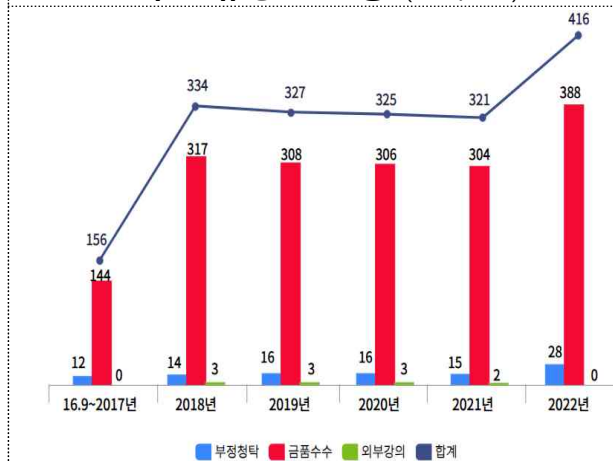
< 연도별 신고접수 추이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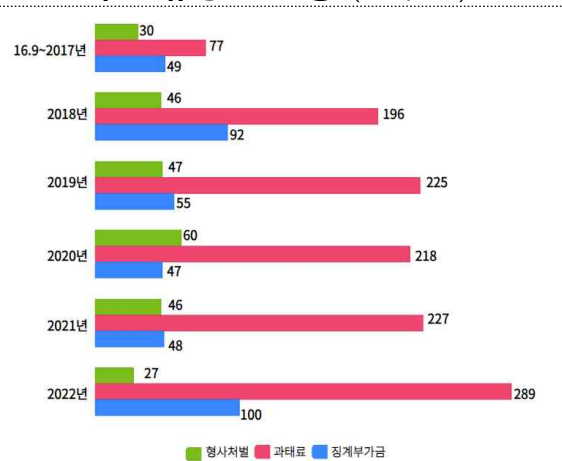
같은 기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공직자들은 총 1,879명으로 유형별로는 금품등 수수 1,767명, 부정청탁 101명이 제재를 받았다.

처분 유형별로는 과태료 1,232명(65.6%), 징계부가금 391명(20.8%), 형사처벌 256명(13.6%) 순으로 집계됐다.

< 위반 유형별 현황 (단위: 명) >



< 처분 유형별 현황 (단위: 명) >



전체 공공기관 중 약 99.4%가 소속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상담, 신고접수·조사·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었다.

또 일부 신설 공공기관 등을 제외한 각급 기관은 연평균 2회 이상 소속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탁금지법상 제도 운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금품 수수자에 대해 징계처분만 하고 수사 의뢰 등 조치없이 사건을 종결하거나 금품 수수자만 처벌하고 제공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통보를 하지 않는 등 총 24건의 부적절한 신고 처리 사례를 확인해 해당 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국민권익위는 각급 기관의 시정조치 여부를 공공기관 종합청렴도에 반영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결과를 토대로 향후 청탁방지담당관 워크숍 등에서 빈발 신고사건 사례, 기관별 부적절 신고 처리 사례 등을 공유해 법 집행력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매년 실시하는 청탁금지법 운영 실태 점검은 제도 취약분야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제도 운영 미흡 기관 시정조치 등을 위한 것으로 법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각 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이 엄정한 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나랏돈 빼먹기’ 국민이 직접 감시한다

부정수급 5대 빈발분야 7월 11일부터 집중신고 기간 운영

(‘23. 7. 10. 국민권익위)

이번 달 11일부터 3개월간 보건복지, 산업자원, 고용노동, 여성가족, 교육 등 부정수급 5대 빈발·취약 분야에 대해 집중신고를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혈세인 보조금 등 정부지원금을 특정인이 부정수급하는 관행적·고질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내일부터 10월 10일까지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보건복지(사회복지시설 지원금, 의료기관 R&D 지원금, 주거급여 등) ▲산업자원(연구개발비, 수출바우처, 창업지원금 등) ▲고용노동(실업급여, 일자리안정자금, 청년일자리사업 지원금 등) ▲여성가족(여성일자리사업 지원금, 한부모가족지원금 등) ▲교육(유치원 보조금, 국가장학금 등) 분야에 대한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다.

국민 누구나 본인의 인적사항, 신고 취지,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등을 기재해 국민권익위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는 국민권익위 세종 종합민원사무소 또는 서울 정부합동민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 ‘청렴포털(부패신고)’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 (세종 종합민원사무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1층
(서울 정부합동민원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청렴포털 누리집) 청렴포털> 신고하기> 부패신고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 대표 민원전화 ‘국민콜110’ 또는 ‘부패 공익신고전화 1398’에서도 신고 상담이 가능하다.

국민권익위는 신고 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신분 비밀보장 등을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 청렴포털 > 알려드립니다 > 비실명대리신고안내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을 적발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이나 증대, 비용 절감 등이 발생하면 기여도에 따라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현장의 제도 운영 역량을 한층 높이고 부정수급 근절 및 신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달 11일 부산광역시 벡스코에서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감사담당관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영남권)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4월 서울특별시에서 열린 유가보조금, 농업직불금 담당자 교육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워크숍에 직접 참석해 정부의 반부패 정책 중점방향을 공유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집중신고 기간을 통해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를 철저히 점검하겠다.”라며, “포상금 증액 등을 통해 신고를 활성화하고 각급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5대 빈발분야



보건복지 분야

의료기관
R&D 지원금
부정수급



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부정수급



산업자원 분야

기업 역량진단 컨설팅,
수출지원 컨설팅 등
서비스 제공하지 않고
부정수급



이미 개발된 기술을
새로 개발하는 것처럼
속여 부정수급



고용노동 분야

취업사실 미신고 또는
실업사유 허위 작성 등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로자를 허위등록하여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지원받고페이백받는 등
고용관련 부정수급



여성가족 분야

허위교사 등록,
사업 수행 실적
허위 보고 등
청소년프로그램
지원금 부정수급



근로자를 허위등록하여
여성일자리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교육 분야

소득 탈루, 서류 위변조하여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사업 미참여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 등
대학혁신지원사업비
부정수급



※ 이 외에도 관련 정부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의 보조금 목적외 사용 등

- 운영기간 : 2023. 7. 11. ~ 10. 10. (3개월)
- 신고대상 :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5대 빈발분야
- 신고안내
 -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110번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번
- 신고방법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 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 (044) 200-7971

※ 우편·팩스를 통한 신고 시, 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신고접수 요망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 신고처리 절차
 - 신고사실 확인 후, 수사기관·감독기관 등에 이첩·송부
- 신고자 보상 및 포상
 - 보상 :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지급(최대 30억)
 - 포상 : 신고로 인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지급(최대 5억)

① 각급기관(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의 환수·제재부가금 부과 현황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20.1월 시행)에 따른 연도별 현황》



②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빈발분야 부정수급 유형

※ '22년 12월 기준 접수·처리된 주요 신고 사례

□ 보건복지분야

부정수급 대상 사업	부정수급 유형
기초생활보장급여	▲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 사실 미신고 ▲ 취업 등으로 인한 소득 변동 사실 미신고 ▲ 가구원 변동 사실 미신고 ▲ 혼인 관계 거짓 신고
어린이집보조금	▲ 아동 허위 등록, 아동 보육 시간 허위 등록 ▲ 보육 교직원 허위 등록, 원장 상근의무 위반 ▲ 보육 교직원의 전출입 정보 불완전 신고 ▲ 야간 연장 운영 사실 허위 신고 ▲ 인가없이 중요재산 매매 미신고 ▲ 교사 대 아동 비율 등 기준미달 상태에서 청구
요양급여	▲ 전담 전문의 기준 미충족 상태에서 허위 청구
장기요양급여비용	▲ 미이용 환자 대상 허위 청구

	▲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실적 부풀려 청구 ▲ 시설장 상근의무 위반
장애인활동지원	▲ 동일 활동 시간에 대한 중복 청구 ▲ 서비스 제공 없이 바우처카드 허위 결제
사회복지시설 (아동, 장애인, 경로당, 노인, 지역자활센터 등)	▲ 자격 미달자를 채용하여 인건비 부정 지급 ▲ 근무 사실 없는 자의 위장 고용 ▲ 서비스 제공 없이 비용 청구
주거급여	▲ 소득·재산변동 사항 미신고 ▲ 부양의무자의 재산 관련 사항 미신고 ▲ 시설 입소 사실 미신고 ▲ 가구원 변동 사항 미신고
기초연금	▲ 교정시설 입소 사실 미신고 ▲ 사망 사실 미신고
사회서비스바우처	▲ 타 사업 중복수급 사실 미신고

□ 산업자원분야

부정수급 대상 사업	부정수급 유형
연구개발비	▲ 이미 개발 완료된 기술을 신규 개발하는 것으로 허위 사업계획서 제출 ▲ 연구과제와 무관한 자재 구입 ▲ 연구인력 허위 등록
스마트제조혁신 (스마트공장)	▲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이 공모하여 사업비 허위 청구 ▲ 최소 사용기간 위반하여 타사에 시설물 판매
창업지원	▲ 허위 근로자 채용
전통시장보조금	▲ 사업비 부풀려 계약하고 실적보고서 허위로 작성
디자인개발지원사업	▲ 페이퍼 컴퍼니를 활용한 자기거래 후 지원금 청구
지방투자촉진 지원금	▲ 수도권 외 지역 고용 창출 인원 달성한 것처럼 허위 신고
강소특구 엑셀러레이팅 지원사업	▲ 타 사업 인건비 중복 신청

수출바우처사업	▲ 참여기업과 수행기업이 공모하여 서비스 제공 없이 사업비 허위 청구
온라인수출지원사업	▲ 매출실적 허위 보고

□ 고용노동분야

부정수급 대상 사업	부정수급 유형
실업급여	▲ 수급기간 중 취업사실 은닉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 허위 신고
청년일자리사업	▲ 협약 근무장소 이탈 사실 미신고 ▲ 타 사업 인건비 중복 신청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 허위 근로자 채용 신고 ▲ 대상자 근무이력(근무지, 수행업무) 조작 등 신청 서류 허위 작성·제출
고용유지지원금	▲ 휴업·근로 시간, 고용유지기간 허위 작성
일자리안정자금	▲ 대상 근로자 급여 축소 신고
노인일자리사업	▲ 참여자 출근부, 활동일지 허위 제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자격 미달자의 허위 신청
일자리창출사업	▲ 컨설팅 실시하지 않고 허위 청구
청년추가고용장려금	▲ 청년 직원 허위 등록
장애인고용장려금	▲ 장애인 허위 고용
장애인근로지원서비스	▲ 자격미달자 채용하고 지원금 수급 ▲ 장애인근로자 보조가 아닌 업무에 종사하고 허위 활동일지 제출
사회적기업	▲ 고용보험 자격관계 허위 신고 ▲ 근무사실 없는 자의 위장 고용 ▲ 출퇴근기록 허위 작성하여 부정청구
직업능력개발훈련	▲ 교육생 배움카드로 허위 결제 ▲ 법정 의무 교육시간 미이수자에게 허위로 교육이수증 발급 ▲ 취업사실 미신고
일학습병행제	▲ 훈련과정에 참여시키지 않고 정상근로하게 하고

	허위 증빙자료 제출 ▲ 교육생 출석부, 평가서류, 훈련서류 등 허위 제출 ▲ 교육 전담인력 담당자에게 지급한 수당 되돌려 받아 편취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사업	▲ 유연근무 활용 근로자 출퇴근 시간 허위 제출
두루누리사회보험료	▲ 급여 축소 신고
워라밸일자리장려금	▲ 근로 단축 시간 허위 신고
유족급여	▲ 혼인 관계 거짓 신고

□ 여성가족분야

부정수급 대상 사업	부정수급 유형
한부모가족지원금	▲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초과 ▲ 소득, 재산변동사항 미신고 ▲ 사실혼 관계 미신고 ▲ 부양의무자에 대한 재산변동 사항 미신고 ▲ 위장 이혼 후 허위 청구
방과후아카데미	▲ 허위 강사 등록 ▲ 강사자격 미달자 채용

□ 교육분야

부정수급 대상 사업	부정수급 유형
유치원보조금	▲ 허위 교사 등록 ▲ 아동 허위 등록 ▲ 자격 미달자에 교사 처우 개선비 지급 ▲ 유치원 간식비로 개인물품 구매
평생교육진흥	▲ 사업기간 이전 또는 종료 후 활동에 대한 청구
국가장학금	▲ 근로활동 없이 장학금 청구 ▲ 소득탈루, 서류 위변조하여 장학금 청구
대학혁신지원사업	▲ 사업 미참여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

정부지원금 (공공재정지급금) 현황 ('22년下 기준 환수·제재부가금)

규모

1,091조

290조
(정부지원금)

'22년 예산

정부지원금

정부 보조금, 지원금 등 법령·자치법규에 따라
반대급부 없이 제공하는 금품 등

▲ 정부지원금 : 290조 원

▲ 환수·제재부가금 : 829억 원

생애
주기



어린이

어린이집 지원

7.5 억



청년

청년일자리창출 지원

80 억



어르신

노인복지 지원

3.3 억

직역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일자리 안정자금

289 억



운수사업자

유가보조금

25 억



연구개발(R&D)기관

국가지원 연구개발비

2.1 억

취약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82 억



장애인

장애수당

0.3 억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 지원금

3.7 억



국민권익위원회

※ 환수·제재부가금 부과 금액은 각급기관의 '22년도 하반기('22.7.1.~12.31.)
제재처분일 기준이며, 대상사업은 '20년~'22년까지 사업임

대한민국을 주도할 '청렴 MZ 인재' 양성

국민권익위, 제1기 '2030 청렴인재 아카데미' 수료식 개최

(‘23. 7. 10. 국민권익위)



대학생, 취업준비생, 직장인을 대상으로 청렴 전문역량을 함양하는 '제1기 2030 청렴인재 아카데미' 수료자 63명이 배출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은 7월 7일 오후 서울 중소기업DMC 타워에서 7월 4일부터 4일간 진행된 2023년 '제1기 2030 청렴인재 아카데미' 수료식을 개최했다.

'2030 청렴인재 아카데미'는 청년들이 국내외 반부패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비사회인·사회초년생으로서 갖추어야 할 청렴 전문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지난해 5월에 신설됐다.

이번 교육의 프로그램은 반부패 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강의를 통해 국내·외 반부패 동향, 반부패·청렴 정책, 청렴윤리경영, 공익신고 제도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또한 교육생들은 주요 부패 사례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분석,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 및 발표 등의 활동을 통해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액션러닝에 참여했다.

교육 마지막 날 교육생들은 교육과정을 통해 쌓은 반부패·청렴에 관한 지식과 3일간의 분임 토의 결과를 토대로 부패취약 산업분야 청렴도 개선 방안을 도출해 발표했다.

수료식에서는 팀별 발표내용을 평가해 총 11개 팀 가운데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세 팀에게 국민권익위원장 상장이 수여됐다. 또한 수료자 전원은 국민권익위원장 명의의 수료증을 받았다.

국민권익위 최명식 청렴연수원장 직무대리는 “청렴인재 아카데미가 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공정하고 청렴한 문화 확산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종합청렴도 평가제도' 우수성 인도네시아에 알린다

국민권익위, 인도네시아 공무원 대상 반부패 역량 강화 설명회 개최

(‘23. 7. 17. 국민권익위)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의 요청으로 우리나라의 반부패 정책을 소개하고 종합청렴도 평가제도 운영 경험 등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월 17일 오후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 공무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역량 강화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종합청렴도 평가 등 우리나라의 반부패 정책과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경험을 공유해 인도네시아 부패방지 담당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국민권익위는 기존 청렴도 평가에서 ▲청렴체감도(이해관계자 설문조사) ▲청렴노력도(기관별 반부패 개선 노력) ▲부패실태(객관적인 부패사건 발생 현황)를 통합한 종합청렴도 평가 체계와 주요 개편 사항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 이에 따른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등을 공유한다.

청렴도 평가는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을 진단하고 부패 취약요인 발굴·개선을 유도하는 제도로, 국제적으로도 우수성을 인정받아 2012년에 유엔공공행정상 공공행정상 대상을 수상했다.

국민권익위가 2007년 인도네시아에 청렴도 평가 제도를 전수한 이후 인도네시아는 제도의 성공적 안착과 반부패·청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우리나라의 반부패 제도와 경험을 국제사회에 적극 소개하고, 반부패 기술지원을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수사·조사기관 이해충돌방지담당관 현장의견 듣는다

공정한 직무수행 위해 이해충돌 상황별 해석 및 적용 기준 수립

(‘23. 7. 20. 국민권익위)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감사·조사업무 수행 기관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7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감사원, 국방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청, 경찰청 등 12개 기관*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과 협의회를 개최했다.

* 감사원, 국방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관세청,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금융감독원

공공기관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해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소속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등을 접수·관리하고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협의회에서는 이해충돌방지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담당관과 직접 만나 조사 등 기관의 업무 특성에 따라 발생 가능한 이해충돌 상황 및 법·제도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법령에 따른 의무 사항을 안내했다.

특히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참여한 만큼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 적용 및 해석 기준에 대해 실제 사례별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 〉

- ☑ 공직자는 조사 등 직무를 수행하며 직무관련자가 자신의 사적이해관계 자임을 안 경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 신청을 해야 함
- ☑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할 시 소속기관장에게 직무 대리자 지정 등 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

국민권익위는 이번 협의회에서 나온 내용을 종합해 모든 공공기관에 보다 명확한 이해충돌 해석 방침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해충돌 직무 유형별 관계기관,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쟁점별 해석 기준을 정립하고 기관별 운영현황과 애로사항을 파악해 필요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Nemo iudex in causa sua)라는 법언처럼 이해충돌방지법은 국민과 정부의 신뢰를 위해 셀프 수사, 셀프 조사, 셀프 감사를 금지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어 “이해충돌방지법은 부패행위로 이어지기 쉬운 이해충돌 상황에서 공직자의 사익 추구를 금지하는 실효적인 부패통제 장치이므로 이해충돌방지법을 적용 받는 200만 명의 공직자가 법을 이해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국민권익위는 명확한 해석기준 정립과 효율적인 제도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